



프랑스의 코로나19 대응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④ - 프랑스

이태훈 (스위스 제네바 국제개발대학원 개발경제학 박사과정)

■ 배경

2019년 말 우한에서 발발해 전 세계로 번진 코로나19(COVID-19)의 여파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발원지인 중국을 넘어 특히나 유럽에서의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2020년 1월 24일 프랑스 보르도 지방에서 유럽 최초의 확진자가 나온 후 프랑스 내 확진자 수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프랑스는 마크롱 정부 주도의 강력한 봉쇄 조치를 통해 미국이나 비슷한 인구의 다른 유럽국가들(이탈리아, 스페인)에 비해 일일 확진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5월 1일 기준 확진자 수는 벌써 17만 명에 육박하고 사망자 수 또한 2만 4천여 명에 이르고 있다.

계속되는 확산세가 언제쯤 끝이 날지 예측할 수 없기에 각국은 보건위기를 넘어 벌써부터 조짐이 감지되고 있는 전 지구적인 경제위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의 특이점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프랑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해보도록 한다.

■ 관련 연구

전염병은 전염력이나 치명률에 있어 제각기 특별하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코로나 19가 미칠 경제적 여파에 대한 예상을 하기란 쉽지 않겠지만 이번 코로나19와 자주 비교되

는 한 세기 전의 전염병을 통해 그 규모를 가늠해 보도록 한다. 스페인 독감(Spanish Flu)은 1918년과 1919년에 걸쳐 전 세계를 강타한 인플루엔자로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약 5억 명의 인구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입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이 사망했다고 추정했다. 또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의 20세기 초 통계자료 분석에 따르면 서비스와 엔터테인먼트 관련 기업들의 수익은 두자릿 수 감소를 경험했다. 코로나19의 경우 순사망률은 4%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지만 보건위기를 동반한 경제위기는 일반적인 경제위기와는 기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얼마간의 기간에 걸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다.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혹은 봉쇄정책 등의 보건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은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미치기에 Gourinchas(2020)¹⁾는 한 달 동안 경제활동의 50%, 두 번째 달에 25%가 감소한다고 가정하면 GDP가 6.5% 감소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불황의 충격이 더 클 것이라 전망했다. 때문에 그는 불황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용 및 기본적인 가계지출 수준 유지를 위한 적극적 노력, 이에 더해 기업 파산과 금융위기를 막기 위한 금융시스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들이 프랑스 내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알아보자.

■ 프랑스의 대응책

재정 지출

2020년 3월 12일과 18일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은 강력한 통화정책과 감독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협응하여 각국 정부는 경제 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재정 정책들을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즉각적인 재정팽창(immediate fiscal impulse)은 의료 보조, 고용 유지, 중소기업(small and medium-

1) Gourinchas, Pierre-Olivier(2020), "Flattening the Pandemic and Recession Curves" <https://drive.google.com/file/d/1mwMDiPQK88x27JznMkWzEQpUVm8Vb4WI/view>

sized enterprise) 지원, 공공투자 등을 포함하는 추가적인 정부 지출은 물론 정부의 수입을 포기함으로써 특정 세금과 사회보장비용을 완화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추후의 어떠한 보상도 없이 즉각적으로 재정수지를 악화시키게 된다.

두 번째는 정부가 세금과 사회보장비용 등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다. 개인이나 기업의 의무는 유효하며 세금 및 사회보장비용은 추후에 납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로써 유동성이 개선됨과 동시에 2020년 재정수지 악화 또한 초래되지 않는다. 몇몇 국가는 추가적으로 대출이나 가스, 전기, 수도 요금 등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도 했다.

그 외의 다른 유동성 공급책으로는 수출 보증장(export guarantees), 유동성 보조, 국내 개발은행을 통한 신용한도 등이 있다. 몇몇의 이러한 조치들은 민간부문의 유동성 포지션을 개선시키지만 만기일 연기처럼 표적집단에 자동적이고 일반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표 1>은 유럽 주요국가와 미국의 코로나19 대응책(4월 16일 기준)의 2019년 GDP 대비 지출비를 나타낸다. 대체적으로 납부기한 연장의 비중이 컸지만(벨기에, 덴마크, 그리스, 헝가리,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등 코로나19의 피해 폭이 큰 나라들은 유동성 공

<표 1> 2019년 GDP 대비 유럽 주요국가와 미국의 코로나19 관련 재정지출

(단위 : %)

	즉각적 재정팽창	납부기한 연장	그 밖의 유동성공급책
벨기에	0.7	3.0	10.9
덴마크	2.1	7.2	2.9
프랑스	2.4	9.4	14.0
독일	6.9	14.6	38.6
그리스	1.1	2.0	0.5
헝가리	0.4	8.3	0.0
이탈리아	0.9	13.2	29.8
네덜란드	1.6	3.2	0.6
스페인	1.1	1.5	9.1
영국	4.5	1.4	14.9
미국	9.1	2.6	2.6

주 : 2020년도 GDP는 예측에 있어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2019년도 GDP가 사용되었음. 그 밖의 유동성 공급책은 오직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것만을 포함함.

자료 : Julia Anderson et al.(2020), "The fiscal response to the economic fallout from the coronavirus" (<https://www.bruegel.org/publications/datasets/covid-national-dataset>).

급책 또한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각적인 재정팽창을 대규모로 실시한 나라는 이 중 미국이 유일하다. 프랑스의 경우 즉각적인 재정팽창보다는 납부기한 연장이나 유동성 공급을 통해 코로나19가 야기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인 내역은 <표 2>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표 2> 프랑스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재정지출(4월 16일 기준)

재정팽창(567억 유로)	납부기한 연장 (2,280억 유로)	유동성 공급책 (3,379.25억 유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보건시스템: €80억(마스크 등 필수적인 장비 구입과 보건의료종사자들을 위한 특별 보상 등) • 2개월간의 고용 유지(부분실업): €240억 (정부: €160억/실업자보험공사: €80억) [직원의 임금 70%(최대 월 6,927유로) 혹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100%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기업에 대한 지원] • 수익 백만 유로 이하 기업들 중 작년 3월 대비 50% 혹은 이상의 영업 손실을 기록한 기업들을 위한 연대기금 조성: €70억 •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과 기업들에 대한 세금과 사회기여금 납입감면: €160억 • 스타트업 기업들을 위한 긴급보조금: €20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과 기업들에 대한 세금과 사회기여금 납입연기: €160억 • 채무 유예(6개월): €1,800억 • 수익 백만 유로 이하 소기업들에 대해 가스, 전기, 수도세와 임차료의 납기일 연기 등: €30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 16일과 30일 사이의 대출에 대한 공공보증: 최대 €3,150억 • 스타트업들을 위한 공공대출: €20억 • 공공투자은행(Bpifrance) 내 예산 조정: €5억 • ‘전략적 경제주체들’ 지원: €200억 • 경제 및 사회발전을 위한 기금(Fund for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9.25억

자료 : Julia Anderson et al.(2020), “The fiscal response to the economic fallout from the coronavirus” (<https://www.bruegel.org/publications/datasets/covid-national-dataset>).

그 외 대응책(4월 30일 기준)²⁾

격리 조치

3월 17일을 기점으로 전염병을 늦추기 위한 엄격한 격리 조치가 5월 11일까지 국가 차원

2) <http://www.oecd.org/coronavirus/en/#policy-responses>

에서 적용되었다. 외출은 필요한 경우(통근, 식료품 쇼핑, 집 근처에서의 운동 등)로 제한되었고 고위험군(고령자 포함)은 자가격리가 권장된다. 또한 도시 내, 지역 및 국가 간 여행이 엄격히 제한되었으며 국경은 최소 30일 이상 봉쇄되었다. 의료진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보육서비스를 도입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교육기관이 문을 닫았다. 또한 공개회의를 포함한 공공행사들이 전면 취소되고 공공장소들 또한 폐쇄되었다.

보건 시스템

상술된 보건 시스템에 대한 대규모 재정 지원에 추가적으로 코로나19 연구를 위한 5천만 유로의 비상기금이 조성되었으며 병원 의료진에 대한 초과근무 한도가 폐지되었고 원격의료 사용에 대한 규제장벽이 낮아졌다. 그 외에 부수적으로 긴급하지 않은 수술은 연기하고 의료진에게 택시 및 호텔을 지원하는 등 총력을 다해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민간부문

민간부문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소규모 및 중소기업의 물, 가스 또는 전기 요금 및 임대료 납부기일이 연기되고, 하나 이상의 금융기관과 연계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신용 조정이 이루어진다.

고용 관련 조치

직장 내 근로자의 코로나19에 대한 노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가능하다면 재택근무가 권장되었다. 학교 폐쇄나 자가격리로 인해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집에 머물러야 하는 근로자에게 유급병가가 주어지고 소규모 기업들을 위한 연대기금 또한 조성되었다. 실업자들에게는 계속해서 혜택이 제공될 것이며 임시직 근로자들은 감금 조치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전체 기간 동안의 급여를 받게 된다. 근무시간 조정을 통해 기업경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특히나 감소된 수요에 영향을 받을 기업들에게는 상기 재정 정책 부분에 소개된 바와 같이 사회보장기여금 및 법인/개인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지급 면제, 사업 대출에 대한 최대 3천억 유로의 공공 보증이 실시되었다.

■ 보완책

지금까지 살펴본 코로나19가 가져올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책들은 재정정책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하지만 최근 여러 경제학자들이 긴급 재정정책들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할 여러가지 정책들을 제안했다. 이 중 몇 가지를 고려해볼 만한 정책들을 소개한다.

Gali(2020)³⁾는 현재와 같은 비상상황에서는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보다 중앙은행의 통화 발행으로 정부 지출의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재정적자로 정부 부채가 높아지면 추후에 세금을 올려야 할 수 있기에 유럽의 몇몇 나라의 경우 부채위기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Wren-Lewis(2020)⁴⁾에 의하면 소비 감소가 일정 산업 부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통화나 재정정책으로는 부분적인 효과밖에 거두지 못하며 보다 세분화된 타겟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Saez and Zucman(2020)⁵⁾은 더 나아가 비상시기에 정부가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소득 상당부분과 기업의 유지비용을 지원하는 최종지불자(payer of last resort)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Stabile, Apouey 그리고 Solal(2020)⁶⁾의 프랑스 내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노동자(Uber Eats, Deliveroo 등의 음식배달앱의 배달기사 혹은 Kapten, Le Cab 등의 승차공유앱의 기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어플리케이션의 수요가 줄어들었으므로 많은 응답자(52%)들이 일을 그만두었지만 19%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월 1,000유로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불안정한 일자리 종사자들은 자신들의 계약이 불안정한 특성으로 인해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들(부분실업 보조, 재취업 보장) 혹은 세금 감면의 혜택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위협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일을 그만둘 수

3) Gali, Jordi(2020), "Helicopter money : The time is now"(https://voxeu.org/article/helicopter-money-time-now).

4) Wren-Lewis, Simon(2020), "The Economic Effects of a Pandemic"(https://mainlymacro.blogspot.com/2020/03/the-economic-effects-of-pandemic.html).

5) Saez, Emmanuel and Gabriel Zucman(2020), "Keeping Business Alive: The Government as Buyer of Last Resort".

6) Stabile, M., B. Apouey, and I. Solal(2020), "COVID-19, inequality, and gig economy workers"(https://voxeu.org/article/covid-19-inequality-and-gig-economy-workers).

없다고 말한다. 저임금노동자들이 코로나19의 위협에 여러 방면으로 더욱더 노출될 수 있기에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 결론

우리나라 또한 코로나19 정국 속에서 재난지원금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각 지자체별로 시행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부는 4인가구 기준 가구당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과연 이 결정이 어떠한 실효성을 거둘 것인지, 그리고 앞서 논의된 다른 정책들을 통한 보완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KLI**